



박근혜정부 외면 ‘장애인 감염대책’…現정부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만들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와 법원의 지시에 4년째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금지촉진연대(장차연)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일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위기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을 협의하라’고 조정을 명령했지만 소송 제기 4

년째 장애인 감염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뇌병변장애 1급의 A씨는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고, 격리돼 있는 14일동안 활동보조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경리조치 과정에서 활동보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별을 받았고 생존권을 위협 받았다며 지난 2016년 10월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감염병 대응관리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은 정부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를 고려한 지침과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 또한 정부 측에 장애를

메르스 당시 차별소송 현재까지… “대응 매뉴얼 만들어 달라”

복지부 법원의 조정명령도 거부… “장애인단체 요구 너무 높아”

고려한 감염병 기본 계획 및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의 요구에도 2018년 초 조정과정에서 관계부처인 복지부는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조정안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 관리 인프라 구축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복지부 담당자, 장애인단체, 질병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강제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했고 조정 과정이 중단되면서 2018년 6월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이 다시 시작된 뒤에도 장애인 단체와 원고 측은 정부와 합의해 장애인 감염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쌍방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복지부는 협의를 위한 대화에 합의했음에도 2018년 이후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원고 측의 요구를 계속해 무시하고 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해 연기되고 있다. 장차연은 “무리한 요구를 전제하지 않은 조정안을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라며 “계속해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영암군,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행영암 실현

저소득 주민에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영암군은 1월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료 체납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020년 기준 월 15,410원)이하 세대로, 약 1,400여세대에 1억25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 명단 및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지원된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 광산구 수완동-(주)한국야쿠르트, 고독사 예방 업무협약

배달하다 돌봄 이웃 어려움 발생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연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기순)는 지난 4일 관내 1인 가

구의 안전 및 안부확인을 위해 (주)한국야쿠르트 수완점과 ‘건강을 전달합니다’ 사업 협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

하기 위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돌봄이 어려운 70여명의 가정을 한국야쿠르트 배달원들이 주2회 정기 방문해 유제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내용이다.

배달 과정에서 배달원들은 2회 이상 미 수령하거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2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바로 통보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기순 수완동 지사협 위원장은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우리 지역 독거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